

총파업 특보
2016년 7월 7일 발행

현상무형 노동자전선
사회연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233 창신빌딩 401호(영등포동1가 602-127)
전화: 02-2068-2237 팩스: 02-2068-2337 이메일: napo@jinbo.net
홈페이지: http://napo.jinbo.net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

7월 20일 정치 총파업으로 분쇄해 나가자!

7월 정세, 노동개악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의 단협개악, 조선 산업의 전면적 구조조정 공세, 공공 성과연봉제 관철과 민영화 방침, 그리고, 노조파괴를 포함한 노동탄압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각 산업 및 부문에서 해고 및 임금삭감, 단협파괴, 노조탄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모두는 정부 노동정책의 직접적이고 동일한 지반 위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부 여당이 4·13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여

소야대가 된 국회에서 법제도 개악을 통한 방식이 여의치 않게 되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노동개악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진영은 상반기 동안 각자의 임단협에 매몰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정치 투쟁전선을 만들지 못하면서 공세에 끌려온 측면이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선제적인 4·24 파업과 국회 법처리를 중심으

로 노동개악 등 투쟁전선이 형성되었다면, 2016년 상황은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노동개악 공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분노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 사회적으로도, 노동진영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공감대도 비교적 높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투쟁의 외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7월 총파업은 노동개악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작!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의 한판 투쟁은 불가피하다

부르주아 야당들은 절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돌려세울 수 없다.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저, 노동자와 민중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책임만 면하려 할 뿐이다. 총선 때처럼 대선에서도 어부지리를 얻고자 부심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그동안 취해 온 행보를 볼 때, 박근혜 정부 집권하에서 골치 아픈 노동개악(취업규칙 일방변경, 공공 민영

화와 성과급제, 조선 구조조정, 쉬운 해고제)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금도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 죽이기 해법'에서 야당들에게 변별점을 찾을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동자들이 투쟁한 만큼 공세를 저지하고, 요구를 쟁취할 수 있을 뿐이다.

7월 총파업 투쟁의 위상과 성격은 '노동개

악에 맞선 총 노동 정치파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진다면 4·13 총선으로 기록되어 있던 박근혜 정부가 노동을 때려잡고 기세등등하게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 정부와 노동자 간의 충돌은 이미 피하려면 피할 수가 없는 정면대립의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이다.

고립된 것은 박근혜 정부이다

자신감을 갖고 7월 총파업에 힘차게 나서자!

자동차, 조선, 공공, 건설 등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현장을 곧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같이 총파업 말고는 막을 재간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현장 동력이 없다거나, 지도부가 파업 의지가 없다는 등등의 낙관적인 근거들은 사라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기 현장은 안전할 것이라며 투쟁을 회피한다면, 이는 자본에 매수당한 지도부임에 틀림없다. 전체 노동계급의 대의를 저버린 자로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파업에 자신감을 갖자! 노동자의 파업은 위대한 힘이 있음을 상기하자! 87년, 97년 파업을 돌이켜 보자! 절대다수가 한낱한시에 생산과 물류와 공공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우리 노동자계급밖에 없다. 투쟁의 외적인 정세도 나쁘지 않다. 4·13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에 호감하는 이들은 30%대 콘크리트 지지층들뿐이다. 현대차와 조선, 공공 동지들의 파업에 '귀족노조 물러나라!'고 하는 보수언론 공세가 과연 진정한 민심의 반영인가? 결

코 그렇지 않다. 80만 민주노총의 투쟁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전체 2천만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작년 투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제가 안 좋는데 파업까지 한다?'가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도저히 못살겠으니 파업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다. 거세게 들고일어난다면 박근혜 정부를 주저앉히고,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는 하나다. 전국 노동자 총 단결로 전진해 나가자!

작년 4·24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은 노동계약의 위협도 있었지만 총파업에 앞장선 한상균 직선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 2016년 투쟁은 작년보다 훨씬 파괴력 있게 상승할 수 있다. 노동계약이 위협에서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투쟁의 쟁점은 ‘노동계약과 구조조정, 노동탄압’이다. 노동계약은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 단협개약의 이름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노조를 깨고,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향한다. 공공, 조선, 자동차, 병원, 공무원, 전교조 등 민주노총의 주력인 조직 노동자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과 건설 노동자들이 노예노동과 쉬운 해고로 연결되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공공부문 노조만의 문제로 본다면, 올해 투쟁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 공공이 깨지면 제조업 확대는 순식간이다. 조선 구조조정을 먼 나라 이야기로 본다면,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비정규

직의 해고는 정규직의 미래다. 98년 현대차 정리해고, 이어진 대우차 사태, 09년 쌍용차 사태를 보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살인적인 해고를 자행하지 않았는가? 7월 20일 파업 집회에서 공공,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노동자들이 이름만 다를 뿐, 결국은 동일한 고통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하나로 뭉쳐 힘을 키워 나가자! 노동자의 미래는 바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에 달려 있다!

가자! 총파업 총궐기투쟁!



성명서

노동자계급을 다 죽이겠다는 선전 포고, 총파업 투쟁으로 단호히 분쇄하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5년 선고에 대한 노동전선 입장!

- 7월 4일, 대한민국 법원은 다시금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중대 범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인 5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논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고와 비정규직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절박한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7월 4일, 사법부의 폭거를 규탄하면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니 사법 정의니 하는 것이, 실로 이 땅의 노동자 서민을 기망하기 위한 입바른 술책이 아닌 적이 있었던 말인가! 대한민국 법원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인혁당 등이 훗날 무죄로 판명된 데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공안사건에서 폭거를 자행했다. 반정부 인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는가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당 방어 투쟁에 현행법 위반이라며 중형을 때리기도 하였다. 법원은, 아니 대한민국의 법은 노동자계급에게 한 번도 공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가진 자와 지배 권력의 안녕이라는 잣대 위에서만, 사법 정의가 통용될 뿐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내려진 5년 선고를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한상균 동지가 최후 진술에서 언급했듯이 이 땅의 노동 현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청년들 중 셋 중 하나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임금과 고용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선업 부실자금 지원으로

연론에 도배되어 나오고 있으나, 구조조정이 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오고 있다. 경제위기때 따른 실업자는 증가되고 있어도, 위장자들은 생색내기 대책뿐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권과의 한판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위와 같은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배 권력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한들, 5년 중형 언도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위기때 따른 민중들의 불만,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이다. 저들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의 투쟁이, 지난 민중총궐기 투쟁보다 더 크게 타올라, 들불처럼 번질 것을 두려워한다.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척하지 않는가!

철창에 가야 할 박근혜가 한상균을 유죄로 내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인 사법부의 오만방자한 폭거는 절대 방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민주노총의 투쟁을 꺾으려는 직접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한 판결이다.

조선소 구조조정, 공공 성과급도입, 비정규직 문제는 보수주류 언론에서도 연일 최대의 뉴스이다. 정부 정책은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정리하며, 비정규직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은 현장으로부터 거세게 올라오고 있고,

민주노총은 7월 20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등 불만에 찬 노동자들의 투쟁 구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배 권력은 투쟁의 기세를 꺾으려 위원장을 더 오래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정권은 노동계약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돌입했으며,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 포고를 이미 자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선고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조합원들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은 노동진영에 대해 과거가 아닌 현재를 따지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죄상을 묻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에서의 쉬운 해고와 제조 현장의 단협파괴, 구조조정, 노동탄압 등 정부의 노동개약을 이대로 허용한다면, 현장은 초토화될 것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길 없다.

-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조직하자! 한상균은 무죄다! 노동계약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과 공단에 프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분노가 모아지고 있을 때, 대대적으로 현장을 총파업으로 조직하자! 한상균 동지에 대한 공격은 바로 우리의 현장과 노동조합,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나로부터 현장에서 7·4 폭거에 대한 규탄 실천과 총파업 조직화를 시작하자!

2016년 7월 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